

|| 목 차 ||

민생안정 관련 주요현안

2008. 7. 30

국 토 해 양 부

I. 부동산 시장 등 최근동향	1
II.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 미분양 대책	3
III.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	7
IV. 고유가 극복대책	9
V.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	12
VI. 유류오염사고 보상대책	15

1 부동산 시장 등 최근 동향

- ◆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
- ◆ 아파트 미분양 등 지방건설경기가 침체상태
- ◆ 고유가로 인해 교통·물류업계의 경영난 가중

【 부동산 시장 현황 】

□ '06년 급등세 이후 안정되었던 주택가격은 금년초에 규제 완화 기대로 다소 불안하였으나 최근 안정세 회복

★ 전국 APT 매매가격 변동률(%)
 ▪ ('05) 5.9 → ('06) 13.8 → ('07) 2.1 → ('08.상) 3.1 / ('08.6) 0.5

□ 아파트 미분양은 '06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'08.3월 13만호를 넘어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최근 다소 감소

★ 미분양 아파트(호)

'06	'07	'08.3	'08.4	'08.5
73,772	112,254	131,757	129,859	128,170

【 건설경기 현황】

□ 건설투자는 '04~'07년간 SOC 투자 정체, 최근 민간 건축 경기부진 등으로 둔화세 지속

★ SOC 예산 증가율(%) : ('04) △5.3 → ('06) 0.9 → ('07) 0.0 → ('08) 4.4
 ★ 건설투자증가율(%) : ('04) 1.1 → ('05) △0.2 → ('06) 1.2 → ('08.상) △0.9

□ 건설취업자수는 정체된 가운데, 건설업체 부도는 증가

구분	'04	'05	'06	'07 ('07상)	'08상
건설취업자수(만명)	182	181	184	180.8(193.4)	187.4
부도업체수(개사)	511	453	324	312(137)	180

【 고유가 관련 교통·물류업계 현황 】

□ 운송비용중 유류비 비중이 큰 구조로 경영부담이 가중

○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는 경영이 크게 악화(매출액중 유류비 비중 : 시외버스 38%, 화물차 64.4%)

○ CNG,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, 택시도 경영 악화

○ 항공·철도·해운업계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年 1,073억원 추가부담

★ 항공 425억원, 외항항운 600억원, 연안해운 32억원, 철도 16억원

□ 유가급등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, 교통량은 크게 감소하고 버스·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증가

○ 금년 6월 통행량은 고속도로 4.8%, 서울 도심(남산권) 7.1%, 도시고속도로 본선구간 3.8% 감소

○ 평일 기준으로 수도권 지하철 3.0%, 버스 0.6%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25만명 이상 증가('08.6)

II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미분양 대책

- ◆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의 주거부담도 적극 경감
- ◆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추진

(가)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근원적 시장안정

- 수요가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연간 전국 50만호, 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
 - 재건축·재개발 절차 개선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
 - * 재건축·재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반복되는 절차와 중복심의 생략,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등 ('08.10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제출)
 -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도입('08.10)
 - * 일정규모(20~99세대)로 건설시 완화된 건축 기준 등을 적용
 -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
 - * 1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시범사업

-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
 -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·구릉지·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하여 저렴한 택지를 확보
 - * '산지·구릉지 등의 택지활용방안' 마련('08.10) 및 시범사업(5천호)
 - 기 지정된 신도시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
 - * ① 분양 : 김포(8~12월), 광교(9~11월), ② 입주 : 판교(12월)
③ 개발계획 : 평택(5월), 송파, 동탄2(7월) ④ 실시계획 : 양주('08)

(나) 지방미분양 해소대책 추진

- 미분양 증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분양 대책(6.11) 추진

< 미분양 대책 주요내용 >

- ① LTV 상향(분양가 10% 인하시 60%→70%) 및 모기지보험 확대
- ②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분양가의 2%→1%)
- ③ 기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연장(1년→2년)
- ④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
 - * 주택규모 확대, 임대기간 단축: 85㎡→149㎡이하, 10년→5년
 - *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(3억) 변경 : 양도가액 → 취득가액 기준

-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,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상황 악화시 보완방안을 검토

(다)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

□ 서민들을 위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

- 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입주 가능한 저가 **소형분양주택** 공급을 확대(연 4만호 → 6~7만호 수준)

* '08년에 주공에서 소형분양을 약 2만호 확대 건설

□ 저소득(4분위 이하) **신혼부부**를 중심으로 **소형**(60㎡이하)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연 5만호 공급

- ① 기존 **청약통장** 가입자 중 ② **결혼 5년**이내(3년내 1순위)의 ③ 무주택 **저소득** 신혼부부로서 ④ **출산**(입양포함) 이후 청약('08.7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→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)

□ 주택기금에서 **장기**(20년) **저리**(5.2%)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('07년 2조 → '08년 필요시 3조원까지 확대 지원)

(라) 임대료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경감

□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공의 **임대주택** 약 40만세대에 대해 **임대보증금** 및 **임대료**를 향후 2년간 동결조치('08.7)

* 국민임대 등 386,659호 대상, 임차인 주거비 364억원 경감

□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**기금대출 금리**를 동결('08.3)

* 주택구입자금 5.2%, 전세자금 4.5%(저소득가구는 2%)

□ 도심내 **다가구 주택** 등을 주공이 매입하여 **도시 영세민**에게 **시중 최저가**로 임대

* '07년 13천호 → '08년 15.5천호 → '09년부터 2만호 수준으로 확대

□ **국민임대주택**은 총 100만호 범위내에서 **지역별 건설계획**을 조정하여 수요가 많은 **수도권 위주**로 확대

* 수도권 공급비중 강화(47% → 55%)

□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**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**를 도입

* **시범사업** : 수도권(5월, 시흥능곡지구 1,858세대 적용), 광역시·기타 권역별(12월) 1~2개 단지 적용 예정

□ 중장기적으로 **주택바우치**(쿠폰) 제도의 도입을 추진('09)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및 주거선택권 강화

□ 전월세금 급등에 대비하여 **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** ('07년 2.8조 → '08년 필요시 4조원까지 확대 지원)

III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

- ◆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투자 지속 확대
- ◆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

(가) 공공 건설투자 확대

- 공기업의 금년도 SOC 투자물량을 확대(5조원)
-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SOC 투자확대
 - SOC 민간 先투자 제도(계속비 초과시공) 도입·실행
 - * 금년에는 국도 53개 구간(3,024억원)에 대한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(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)
 - BTL(4.2조원) 및 BTO(3.3조원) 등 민간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
 - * BTL :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학교, 軍막사 등
 - BTO :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도로 등

(나) 해외건설 활성화

- 고유가 특수 등으로 450억불 이상 수주 예상
 - * 해외수주 : ('06)165 → ('07)398 → ('08) 450억불 예상(상반기 259억불)
- R&D 투자 확대, 진출전략 다변화, 전문인력 양성(年 700명) 등을 통해 체계적 수주지원 (7.4 「해외건설지원 종합대책」 마련)

(다) 기업부담 감소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

-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
 -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(2~4년 → 6월)하여 기업에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('08.5)
 - 도시기본계획을 지침형 계획으로 전환('08.6)하고, 도시계획 승인·결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
 - *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('08.3)
 - * 특별시·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국토부 장관 승인권한 폐지(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제출, '08.7)
-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이 안정된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 유도
 -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('08.3), 지방 전매제한 기간 단축(공공택지는 5~3년→1년 / 민간택지는 폐지, '08.6)
- 원자재 가격 급등('08.3월 이후 철근 63% 상승)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방지를 위해 단품슬라이딩제 시행('08.7)
 - * 주요 자재가격이 3개월간 15% 이상 증감한 경우 상한제 정기조정(매 6개월)때 반영될 자재가격을 3개월 앞서 건축비에 반영
- 민간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, 과도한 부담금 등을 개선
 - * 교통영향평가의 건축위원회 통합심의('08.3), 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 기초지자체로 이양('08.3),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('08.2)

IV 고유가 극복 대책

- ◆ 고유가로 경영이 악화된 **교통·물류업체 지원**
- ◆ **화물운송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**
- ◆ **에너지 효율적인 교통·물류체계로 전환**
 - * 국가 에너지 소비비중('05) : 수송 21%, 건축 23%

(가) 영세 교통·물류업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

- **버스·화물차·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**
 -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*를 유지하면서 **유가상승분의 50%를 추가지원**('08.7.1일부터 1년간 지원, 1,800원/ℓ 기준)
 - * '01.7월부터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(버스, 화물차, 연안화물선)에 대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
- **화물차 감차 및 LNG 화물차 보급**
 - 세부방안 마련('08.6~9) 후, 10월부터 **감차보상**('08. 300억원) 및 **LNG 전환사업**('08. 100억원) 시행예정
- **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확대**
 -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 이상(4~5종)에서 **10톤 미만(1~3종) 화물차까지 확대**('08.7.1)

☞ **유가 급등세가 재연·확대될 경우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추가 지원조치 검토**

(나) 화물운송시장 구조를 선진화

- **불법 다단계 운송 및 지입제 개선 등 낙후된 운송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**
 - * 화물운송제도개선 T/F 구성('08.7) → 개선대책 발표(금년말)
- **표준운임제* 도입**
 - * 화물연대는 정부가 최저운임을 고시하고 위반시에 화주 등을 처벌하는 **표준운임제 도입을 지속 요구**
 - 화물연대, 화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「**화물운송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**」 구성('08.8, 총리실)
 - **연구용역**('08.8) 등을 통해 시장작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**시범운영 및 법제화** 추진('09년)

(다) 건설기계업계 시장구조 개선

- **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용확대**
 - 유류비를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**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** 제도시행('08.5.6)
 - 공공공사에 우선 정착시키고 민간공사에도 지속 확대
- **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기계분야 거래관행 개선**
 -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을 위해 「**건설기계선진화 T/F**」를 구성('08.6)·운영중으로 금년말까지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

(라) 에너지 절약형 교통·물류체계 전환

- 고유가·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·연안해운 등으로 다변화
 - 기후변화협약에 부합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*” 제정 추진('08)
 - * 온실가스,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평가관리 체계 구축
 - *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(Modal shift)시 인센티브 부여
 - * 보행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등
- 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(Eco-drive) 정착 촉진을 위해 민간중심의 Eco-drive 운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
 - * Eco-drive를 실천하는 경우 자동차 연비가 최대 30%까지 개선가능
-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병행추진
 - 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 주택·공공건물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 추진
 -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시범도입('08.10)
 -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,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 제공('08.10)

V

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

◆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

- * 가계교통비('06년, 49조원)는 가계 소비지출중 식료품비(26.4%), 교육비(11.8%)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큼(10.9%)

◆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(가) 서민 생활교통비 부담 경감

- 20킬로미터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출퇴근 자동차(05~09시, 18~22시)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% 할인
 - 차종별·출퇴근 시간대별로 최대 50%*까지 통행료 감면
 - * 2.5톤미만 화물차, 16인승이하 승합차, 3인이상 탑승 승용차 (05~07시, 20~22시)
- 도시근교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운임 인하('08.6)
 - * 새마을호 : 7,500원 → 4,700원, 무궁화호 : 3,200원 → 2,500원
- 버스 준공영제를 '09년까지 전체 광역시로 확대하고, 운송수단간 환승할인을 통한 서민 버스요금 부담 완화
 - * 경영합리화로 운임인상을 억제하되, 시외버스 등 인상이 불가피한 업종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

(나)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개선

□ 버스 이용편의 확대

- 서울·경기 등에 **버스중앙차로제*** 지속 확대('08) 및 경부 고속도로(오산-한남대교 45km) **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**('08.7)

- * (서울) 신반포, 노량진, 신촌 등 4개 구간(16.8km) 완공
- * (경기) 안양~사당(10.4km), 용인~서울(16.0km) 노선을 완공

- **간선급행버스(BRT) 시범사업***을 차질없이 추진('06~'12)하고 거점간 급행수요 처리를 위해 **광역버스업종을 신설**('09.1)

- * '10년까지 하남-천호(10.5km), '12년까지 청라-화곡(18.2km) 완공 예정

□ 광역급행열차 운행

- **경원선(성북~동두천)·중앙선(용산~팔당) 운행**('08.12)

- * 급행운행으로 서울 도심지까지 통행시간 20~25% 단축 가능

□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

- **광역단위 버스운행정보 제공**을 위해 지자체간 버스도착 정보 안내시스템(BIS) 연계('08 대구, 울산, 제주권 / '09 수도권)

- **교통카드 전국호환 및 복합 다기능화로 대중교통이용 유도**
- 전국호환계획 마련('08.10), 카드개발('08.12) 및 보급('09.1)

□ 수도권 혼잡구간 간선교통망 확충

- (도로)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에 **제2경부(서울~세종), 제2외곽순환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(7×4+3R) 조기 건설**
- (철도) 선로용량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**서울~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 추진**

(다) 대중교통수요 전환에 대비

□ 도시철도

- **예비차량을 증편**(현 7편성 → 16편성)하고, **최대 혼잡구간**(2호선, 신림~강남)에 **2편성 추가**(3,200명 수용 가능)
- 향후 **신규노선 증설**(9호선 '09.5 개통), **신호시스템 개선** 등으로 증가된 수요를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

□ 광역철도

- **배차간격 단축*** 등 열차운행시각 조정
* '08.8.1 분당선(선릉~오리) 배차간격을 4~5분 → 3~4분으로 단축

□ 버 스

- 출퇴근 수요 집중노선에 **예비차 투입 및 집중배차**
- 추가적인 용량확대가 필요한 경우 **출퇴근 시간대 전세 버스 투입**(공동운수협정 체결)

◆ 오염 사고 피해주민 보상대책의 차질없는 추진

◆ 생태계 복원 등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

[가] 피해주민 보상대책 추진

- 「피해주민 지원 특별법」 제정('08.3)
 - 정부의 대지급, 국제기금 보상한도(3,216억원)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원, 보상지연 시의 대부근거 마련
- 보상청구가 완료된 1~2월분 방제 인건비는 국제기금의 중간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대지급 실시중
 -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인건비는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협의를
- 유류오염 피해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

◆ 특별 공공근로사업 현황

- 대상지역 : 충남 특별재난지역(보령, 서산, 서천, 홍성, 태안, 당진)
- 사업내용 : 특별재난지역내 환경정비 및 폐사어류 정리 등
- 소요예산 및 사업량 : 총 200억원 / 日 3,800명(150일, '08. 7~)

- 국제기금의 보상지연시 대부지원을 위해 지역과 업종의 피해 상관성, 소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표준대부기준 마련중('08.8)

[나] 생태계 복원 및 해수욕장 개장

-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·고시 및 복원계획 수립
 - 관련부처(환경부, 농수산부 등)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정·고시('08.8)하고 생태계 복원계획도 수립('08.12) 예정
- 유류피해 지역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(6.15) 및 주민 공청회 실시(6.18)
 - * 해양오염영향조사('08.4) 결과, 해수 수질 및 퇴적물(모래사장)은 수질기준 및 국제 권고치를 만족
 - 정밀조사(백사장내 유막 및 냄새 존재여부)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등과 협의, 대부분 개장완료
 - * 7.30 현재 피해 해수욕장 15개중 2개(의항, 구름포)를 제외하고 개장완료

[다]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

-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운항 조기금지('15 → '10) 조치 및 정유사의 단일선체 이용률 저감 추진('08년 목표 42%)
-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검토(현재 3,216억원 → 추가기금 한도 1조 2천억원)
 - 정유업계,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시행을 통하여 금년 중 추가기금 가입에 관한 방침 결정

참고 1 국토해양부 2008년 예산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6 예산	'07 예산 ①	'08 예산 ②	증감 (②-①)	
					%
계	203,614	200,725	207,772	7,047	3.5
□ 도로	71,837	73,554	75,998	2,444	3.3
○ 고속도로	10,310	9,755	9,293	△462	△4.7
○ 국도건설	33,714	33,399	34,965	1,566	4.7
○ 도로관리	7,854	8,030	7,652	△378	△4.7
○ 민자유치 지원	12,702	14,501	16,177	1,676	11.6
○ 지자체도로 지원	7,257	7,869	7,911	42	0.5
□ 철도	37,797	36,223	38,016	1,793	4.9
○ 고속철도	3,700	3,211	4,209	998	31.1
○ 일반철도	14,056	14,006	14,178	172	1.2
○ 철도안전 및 운영	15,640	13,703	14,206	503	3.7
○ 광역철도	4,401	5,303	5,423	120	2.3
□ 도시철도	13,226	13,109	13,118	9	0.1
○ 도시철도건설	7,856	6,779	6,777	△2	△0.0
○ 도시철도 경영개선	5,370	6,330	6,341	11	0.2
□ 항공·공항	3,919	3,334	2,109	△1,225	△36.7
○ 인천공항	3,071	2,000	1,300	△700	△35.0
○ 일반공항	848	1,334	809	△525	△39.4
□ 물류등 기타	7,488	8,405	8,851	446	5.3
□ 해운·항만	19,467	20,592	20,677	85	0.4
○ 신항만	10,402	12,250	10,398	△1,852	△15.1
○ 주요항만 등	9,065	8,342	10,279	1,937	23.2
□ 수자원	22,426	16,210	16,007	△203	△1.3
□ 지역 및 도시	4,804	5,544	6,698	1,154	20.8
□ 산업단지	3,711	4,045	4,979	934	23.1
□ 주택	11,440	11,003	11,718	715	6.5
□ 해양수산어촌	2,855	3,101	3,573	472	15.2
□ 해양	644	605	1,028	423	69.9
□ 국고채무부담행위	4,000	5,000	5,000	-	-

참고 2 국토해양부 추경예산(안)

1. 추진 배경

-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와 유류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망 확충 등 '08년도 추경편성 추진

2. 국토부 추경안 주요 내용

- 국토부 추경은 총 1조 331억원

- 도로 4,561억원, 철도 2,600억원, 도시철도 1,050억원, 항만 121억원, 산업단지 1,999억원으로 '08 예산대비 5% 증액

* '08년 전체 추경은 4조 9천억원(우리부는 전체 추경대비 21%)

< 부문별 추경내역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7 예산	'08 예산 ①	'08추경안 ②	증감 (②-①)	
					%
전 체	200,696	207,772	218,103	10,331	5.0
○ 도로	73,554	75,998	80,559	4,561	6.0
○ 철도	36,223	38,016	40,616	2,600	6.8
○ 도시철도	13,109	13,118	14,168	1,050	8.0
○ 항만	20,592	20,677	20,798	121	0.6
○ 산업단지	4,045	4,979	6,978	1,999	40.1

3. 집행계획

- 추경 확정후 신속한 예산배정·집행으로 민생부담 완화